

# 5년간 122명 숨졌다… 물놀이 가장 위험한 달은 ‘7월’

20대 광양서 다이빙하다 중상  
7월 사망자 52명…계곡·하천 순  
수영 미숙·안전 부주의·음주 수영  
“충분한 준비운동·구명조끼 착용”

무더위가 이어지는 7월, 피서객의 발걸음이 계곡과 바다로 향하는 가운데 ‘물놀이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오후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동곡계곡. 20대 남성 A씨는 다이빙을 시

도하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사고 직후 하반신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수심 확인 없이 다이빙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계곡은 바닥에 바위가 많고 수심이 일정치 않아 다이빙 시 머리나 척추 손상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무모

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2명. 이 중 43%에 달하는 52명이 7월에 사고를 당했다. 장소별로는 △계곡(39명) △하천(37명) △해수욕장(32명) 순으로 위험이 높았다. 계곡은 수심이 불규칙하고 미끄러운 바위가 많아 미숙한 접근 시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물놀이 사망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

영 미숙(44명) △안전 부주의(40명) △음주 수영(21명)이 꼽혔다. 특히 구조를 하려다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무작정 뛰어드는 구조는 금물”이라며 “현장에 비치된 구명환, 막대, 밧줄 등 장비를 활용하거나 119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곡 등 물놀이 장소에 대한 사전 통제와 상시 감시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상당수 지자체가 사고 다발 계곡에 감시원과 경고문, 출입 금지 구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한 소방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며 “특히 피서철엔 계곡에 접근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물에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희 기자

##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438kg 폐기

도매시장 등 유통 농산물 검사  
깻잎·쑥갓 등 1.6% ‘부적합’ 적발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37종 1438kg이 적발, 압류·폐기 처분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중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허용기준 초과 빈도가 높았던 품목 2320건에 대해 잔류농약(345개 항목) 검사를 실시, 깻잎·쑥갓 등 37건(1.6%)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쑥갓(각 4건) △부추·상추·쌈ض·파(각 3건) △냉이·봄동·유채·시금치·쌈당귀(각 2건) 등 37건이다. 정상아 기자

기준초과 농약 성분은 △살충제 ‘터부포스’(9건) △살균제 ‘디니코나졸’(5건) △제초제 ‘펜디메탈린’(5건) △살충제 ‘다이아지논’(3건) 등 22종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폐기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가 제한됐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와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주·야간 철저히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목포고·목포여고 부지 활용 주민의견 듣는다

대면 여론조사·온라인 설문조사  
전라남도교육청이 목포고와 목포여고 통합 및 이설로 생긴 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 지역민 의견을 듣는다. 전남교육청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이설을 앞두고, 기존 학교 부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목포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면 여론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해 추진된다. 시민 대상 대면조사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주요 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된다. 교직원·학생·학부모와 목포시청·목포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은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진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목포시청,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설문조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노병하 기자

설문 항목은 △학생 공간(어린이 놀이 및 교육시설,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진로·직업체험, 평생교육 등) △문화·예술시설(컨벤션, 도서관 등) △체육시설(스포츠시설, 훈련장 등) △관공서·공공기관 이전(교육지원청 등)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 결과는 향후 기존 학교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나아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답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목포고·목포여고 부지 활용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목포 원도심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양동시장 인근 도로 달리던 차량서 불

광주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광주 서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원 45

명을 투입해 8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차량이 그을리는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부 앞좌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광주 남구가 7일 구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명예 구민패를 전달했다. 남구청 제공

## 광주 남구,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명예구민패 전달

비상계엄 선포 비판 ‘외로운 투쟁’  
광주광역시 남구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명예 구민패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남구는 이날 오전 구청 7층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남구 명예 구민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외로운 투쟁에 나섰고, 지난 2월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1980년 5월 광주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등 신념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행보를 보이며 남구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병내 구청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 견제 과정에서 결기 있는 행동에 나선 김

상욱 국회의원의 참모습과 5월 정신이 일맥상통하다고 판단, 김 의원을 처음 대면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민주평화대행진 자리에서 명예 구민패 수여 의사를 전했고 이날 구민패 전달식이 열렸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준 기자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제 굴 해상 채취까지 확대”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 등 기대  
전라남도는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지난 6월 24일 개정돼 그동안 여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돼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지난 10년간 전국 생산량이 30만 톤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돼 9~4월 겨울철 집중 수확기에 양식어가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허용하

고, 적용 업종에서 굴 육상 가공(선별·세척·까기·포장)뿐만 아니라 해상 채취(모찌기·단련·수하·양성·채취 등)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단계적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전남도 중앙규제개선 과제 안건 제출,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전남도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에 이르러 올 하반기에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하게 됐다. 오지현 기자

## 광주 광산구,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광산구는 전년도와 비교해 건강 정책 성과가 크게 향상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뽑혔다.

광산구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영유아부터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필요한 건강교육,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이주배경 가정, 저소득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도 힘썼다.

이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주배경 가정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문턱을 낮춰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시민의 생활 양식, 지역 특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노력이 지역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실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